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미국, 반덤핑·상계관세법 강화

미 의회의 유력 의원그룹이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양보한 항목을 보강하기 위해 반덤핑법 등 미통상관련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제3국을 우회한 대미 덤핑수출에 대한 과세와 외국의 불공정한 상관행에 대한 제재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등 매우 보호주의적인 내용이며 이들 의원그룹은 라운드 합의실시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작성한 의원은 하원의 레굴러 의원(공화당) 및 미네타 의원(민주당) 등 의원그룹인데 이들 그룹은 법안제출에 있어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측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의향을 감안한 가운데 법안을 작성했음을 시사했다.

법안의 골자는 ①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의 강화 ② 외국에 대한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③ 외국의 불공정상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제재권한 설정 등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특히 반덤핑에 관해서는 UR 합의 때문에 미국이 양보한 제3국 우회방지조치와 반덤핑세의 5년 이상 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라운드에서 양보한 조치를 국내법으로 ‘부활’ 시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작년 12월의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UR 합의에 대한 미 산업계와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도 이들 의

원그룹이 제출한 법안 등을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실시법안 내용을 확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미·일 EU 특허심사방법 통일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 지역의 특허청들이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심사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기술자료에 대한 조사범위 및 특허 심사방법 등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일간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세 지역 특허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 기술자료에 대한 조사범위 및 특허 심사방법 차이가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 국가간 서로 다른 특허심사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3개 특허청은 오는 5월 23일부터 4일간 도쿄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 공동규칙을 확정한다. 정식 결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3개 특허청 장관 회담에서 이루어진다.

3. 미-대만간 통상마찰 재연조짐

중국에 이어 대만이 수인노동력 이용문제로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 그랜드 정션에 사는 에디 터커라는 10세의 소년이 대만 산 장난감비행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대만 수인의 탄원서를 발견한 것이 미·대만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소년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만을 조사해 달라’는 리우 신 핑 씨의 탄원서

를 발견. 이를 백악관에 보냄에 따라 대만의 인권침해 및 수인노동력 이용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뉴스가 대만 주요 일간지의 머릿기사로 보도되면서 대만 의회측도 정부에 대해 수인 인권침해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정치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측은 이에 대해 복역기간동안 수인들이 노동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이들은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인인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현 대만의 관련법상 수인들이 하루에 6~8시간 노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도 수인노동력을 활용, 수출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만 정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측은 수인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양국간 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WIPO,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조약 추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WTO 통합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분쟁발생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WIPO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조약'을 추진하고 있어 개도국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UR 협상 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WTO 통합분쟁절차와 별도로 WIPO는 UR 협상이 개시된 지난 '86년부터 'WIPO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조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발생될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WTO와 WIPO에 의해 각각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WIPO는 현재 이 조약 성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진행중이다.

이준석 특허청 담당사무관은 특히 이 조약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복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WTO의 해결절차와 달리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거나 제도운영이나 분쟁해결관련 경험 및 지식이 크게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WTO 통합 분쟁해결절차는 의무위반시 철저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 공산품 등 여타 교역 분야 등에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선 효과적으로 대응키 어렵기 때문이다.

EU·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들도 UR 협상 결과 성립된 WTO 분쟁해결절차와 WIPO의 절차간에 적절한 상호보완 관계가 설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WIPO가 추진중인 이 조약이 성립될 수 있을지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미-EU 공공조달협상 타결

미키 캔터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와 리언 브리튼 EU 통상 담당위원은 전기설비부문 및 지방 정부수준의 공공조달시장개방 등에 4월 13일 합의했다.

캔터 대표와 브리튼 위원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5월 체결된 공공 조달관련 미-EU 쌍무 양해각서의 내용을 더욱 확충키 위한 이틀간의 회담을 진행한 결과, 공공조달시장개방과 관련한 양측간의 일부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양측대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조인을 위한 GATT 마라케시 각료회담에 참석하

고 있는 가운데 미-EU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 확대 협상을 벌여 왔다.

미국측 관리들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관심사항이었던 미국 기업에 대한 EU 통신조달시장의 개방요구는 EU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 연방정부 지원자금에 의한 운송로, 고속도로, 공항 등의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철폐토록 하는 EU측의 요구 역시 수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해 브리튼 위원은 미국의 39개 주와 7개 주요도시가 지방정부 수준의 미 공공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의 인구밀집 주와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인디애너폴리스, 델라스, 내쉬빌, 샌앤티오 등의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브리튼 위원은 또 이번 협상에서의 성과로 EU 기업들은 향후 중전기설비, 발전설비, 컴퓨터장비, 제약 및 의료장비, 방화 통제설비, 사무설비 등의 미 공공입찰에 미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댓가로 EU측은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EU의 모든 회원국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상품·서비스·공공사업부문의 조달시장을 미국 기업에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튼 위원은 이번 미-EU간 공공조달시장 개방확대에 대한 합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시장개방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EU는 향후 이 부문의 시장자유화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터 USTR 대표는 이번 합의로 미국과 EU 기업들은 상대방 시장에서 연간 2천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EU는 이같은 기회를 더욱 확대키 위해 통신시장 등의 미해결 과제

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미·일 포괄협정의 재개 불투명

일본은 미국의 수치목표 도입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UR 협정 조인식에 참석키 위해 이곳에 온 일본 통산성의 한 고위관리는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증진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포괄경제협정에 임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일본은 미국의 수치목표 도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포괄경제협정의 실패를 이유로 엔화 강세가 유도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포괄경제협정은 양국의 무역관계 증진 및 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됐지만 일본시장의 개방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차이가 확대되면서 지난 2월 이후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포괄경제협정의 실패 후 미국은 불공정 무역행위국에 대한 보복조치 시행을 내용으로 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양국 무역관계는 위기국면에 돌입했다.

무역마찰의 심화는 엔화 강세를 유발시켜 엔환율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경기회복 및 수출기업들의 수익확보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통산성 관리는 미·일 양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포괄경제협정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 가정용 VCR 국제규격에 합의

차세대 가정용 VCR의 국제통일규격이 완성됐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V(오디오 비디오) 관련 메이커 50여 개사가 참가하고 있는 HD 디지털 VCR 협의회는 현

행방송 및 HDTV(고화질 TV) 방송을 디지털 기록하기 위한 최종사양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가정용 디지털 VCR의 상품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일단 정리됐다. 이에 따라 관련 메이커들이 이 규격을 채택, 소형·경량의 캠코더와 하이비 전용 VCR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작년 9월 발족한 HD 디지털 VCR 협의회에는 프랑스의 톰슨, 네덜란드의 필립스, 일본의 소니·마쓰시타(송하) 전기산업 등 유력 메이커들이 참가하고 있다. 최근 애플 컴퓨터, IBM 등 정보기기 메이커들과 기타 테이프 메이커들도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된 규격은 현행 TV 방송용 SD 사양과 HDTV 방송을 기록하기 위한 HD 사양 등 두 가지이다. 기록방식과 TV의 크기, 녹음시간 등과 같은 규격들이 정해져 있다. HD 디지털 VCR 협의회는 금년 중으로 이들 규격을 전기기기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C에 제안할 방침이다. IEC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명실상부한 국제 표준규격이 된다.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과 음성을 녹음하는 가정용 VCR은 현행 아날로그 방식 VCR에 비해 더빙을 계속하더라도 화질이 덜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방식의 기술은 카세트 테이프의 소형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세계 각 메이커들은 문고판 도서보다 조금 작은 표준 카세트(현행 방송에서는 녹음시간 4시간 30분)와 담배팩보다 조금 작은 소형 카세트 분야 등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8. 일본, 멀티미디어 시장 10년 후 50조엔 규모

10년 후 일본 멀티미디어 시장규모는 50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 협회가 최근 조사, 발표한 '21세기 퍼스널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7조엔에 달하는 일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10년 후 50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갈

은 시장확대 규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메이커들이 여러 업종의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기술수준 확보에도 주력하는 등 선결과제가 많은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도 특화가 이루어져 각 분야별 높은 수준의 기술획득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주요 관건이 될 분야는 멀티미디어라고 진단했다. 멀티미디어의 주요 시장은 △오락·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인수요 시장 △홈 쇼핑 등을 위시한 가정시장 △비즈니스 시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이들 세 시장은 모두 상당한 규모확대가 예상된다. 오락·교육용 시장의 경우 영상·음향·정지화면 등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는 것이 기업전략상 유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메이커들의 개발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그 결과 다른 업종간 제휴가 활발히 추진돼 멀티미디어 시장확대를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 일, 경제회복세 점차 가시화

일본 경제는 제조업계의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공공투자 증가와 개인소비를 호조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장성 지방 주재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의 자본재지출 및 인력수요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인소비지출이 가정용필수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생산부문의 회복전망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대형전자기계류, 주택관련생산 및 공공투자사업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 회계연도 중 기업의 채산성과

매출액도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쌀, 채소류 등이 공급부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일 대장성 지역대표들은 21일 대장상이 주재한 회의에서 엔화 시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엔화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나 일본 기업들이 극단적인 인력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각한 인력감축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대장성의 주재관들은 특히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6조엔 규모의 소득세감면조치 연장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10. 중, 첨단고급기술 실용화 진전

중국은 5년 전부터 햇불계획(토치플랜)을 추진한 이후 첨단고급기술의 상업화, 산업화 및 국제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불계획은 지난 '88년 국무원 의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조성한 120개 첨단기술 개발지대에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신소재, 생물공학, 전자 및 정보, 기계 및 전기통합, 성력화기술 그리고 환경보호기술 등 여러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했다.

지난 해 중국전역에 산재한 기술개발지대의 기술 및 신제품 거래액은 573억원, 수출실적은

7억 3,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술개발지대에서의 외국인 합작투자기업 수도 무려 4,000개를 넘어서고 있고 첨단기술, 규모의 생산, 숙련공들을 활용하는 기업체 수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광섬유통신, 전자정보와 같은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측은 이같은 추세로 나가면 오는 2천년 첨단과학기술부문 GNP(국민총생산) 및 수출기여도는 각각 1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11. 작년 한·중 무역 108억불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경제에 정통한 일본의 국제무역신문이 중국측의 통계를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과 중국간의 직접무역은 '93년중 90억 8000만달러에 이르러 전년보다 42.3% 증가하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이 중 중국측의 수출이 39억 2900만달러로 5.5% 증가했고 수입이 51억 5100만달러로 94.1% 증가했다. 이에 간접무역을 포함시키면 총액은 108억달러에 달해 한국은 중국에 있어 세계에서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 됐다.

양국은 '해운협약'·'산업협력강화에 관한 의향서'에 조인하는 동시 '경제·무역과 과학기술협력 혼합위원회' 개최 등 관계강화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1~2월의 직접교역도 합계 14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1% 증가하는 등 계속 두드러진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중국의 수출이 7억 2000만달러, 수입이 7억 4500만달러였는데 수출 신장률이 수입의 신장률을 20포인트나 웃돌았다. 이는 중국의 외무 및 공무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도모한데다 환율 일원화 실시가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행의 인가 실적에 따르면 '92년 말 현재 1042건, 투자액은 9억 6000만달러, 실제 투자안건은 646건, 투입액은 4억 6500만달러에 달했다. '93년 1년간의 인가 건수는 616건(전년보다 32.7% 증가), 투자액은 5억 9700만달러(75.7% 증가), 실제 투자안건은 376건, 투입액은 2억 6000만달러에 달했다. '93년 1년간 종전까지 5년간의 누계를 웃도는 추세를 보였다.

12. 러-구 소 공화국 교역불균형 심화

올 해 구 소련 15개 공화국과 러시아간의 교역불균형 규모가 15개 공화국 GDP 총액의 15%인 1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동보고서를 작성한 IMF의 토마스 울프 러시아 담당부장은 각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금융공급이 준데다 러시아가 국제수준의 에너지 공급가격을 요구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이들 구 소련국가들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 실제 교역불균형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MF 보고서는 발트 해 국가들이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그 외 국가들은 금융수요의 재조정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전체적인 거시 경제 정책 속에서 여타 공화국들에 대한 금융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방측의 자금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교역액 감소를 매우기 위해 향후 서방측의 자금지원이 러시아보다는 이들 구 소련공화국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금지원액이 크면 클수록 이들 공화국의 채무가 늘어나 그 장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역액인 150억달러 전부를 다 지원하기 보다는 최고 90억달러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 일본, 반도체시장 대만산 유입 급증

일 경산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대만산 반도체는 공작기계·FA용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선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퍼스컴용 등 특수품 분야에선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만산 반도체 중 일본에서 약진이 돋보이는 품목은 스위칭 방식을 사용, 전원을 고주파전력으로 전환한 뒤 직류를 만들어내는 스위칭 전원이다.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대만산 스위칭 전원의 일본내 시장점유율은 알 수 없으나 2,600억엔대의 일본시장 중 16%를 차지하는 퍼스컴과 그 주변기기·게임기기용을 중심으로 일본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관련업계는 대만산 스위칭 전원이 엔고 등으로 이들 분야에서 전년비 두자리 수대의 수요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만산의 이같은 매출포인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데 있다. 일본산보다 적어도 10% 이상 저렴하다는 게 수요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퍼스컴용 등 특수품의 경우 일본산 가격은 너무 비싸 완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저가 대만산의 수입증가는 일본의 스위칭 전원 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수요업체들의 가격인하 압력이 강해지는 한편 현재 동경시장에선 멀티 출력 70W 제품이 개당 4,300~5,800엔에 거래되는 등 연초에 비해 약 10% 하락했다.

대만산은 마스크 ROM-EPROM 등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도 침투되고 있다. 이를 반영

하듯 1~2월 중 일본의 대만산 메모리 수입량은 308만개로 전년동기비 4배나 증가했다.

14. 미·일 산업기술 10개분야 협력

미·일 포괄경제협약에서 검토되어 오던 '민수산업기술의 개발에 관한 협력'의 합의내용이 최근 최종 확정됐으며 이 합의내용은 미일 양국정부가 반도체재료 및 탄소섬유 등 10개 항목의 개발테마를 선정, 올 가을부터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정부는 오는 6월 초 합의문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미국이 보유한 군사기술에 일본의 민수용기술을 접목시켜 군사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군민전환'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양국정부는 각각 자국의 민간기업에 이들 개발테마에 참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정부는 6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동서 경제·무역장관회의에 참석할 일본의 하타에이지로 통상상과 브라운 미 상무 장관 사이에 산업기술 협력에 대해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금년 2월 워싱턴에서 개막된 미·일 포괄경제협약에서 수칙목표를 포함한 객관기준의 정의를 둘러 싸고 미일 양측이 대립, 정부조달, 보험, 자동차·동부품의 우선 3개 분야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 환경문제 등 지구환경에 대한 협력에서는 합의,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관한 2국간협력'의 한 분야로 민수산업기술에 관한 협력내용을 타결키로 한 바 있다.

양국은 10개 항목의 협력안건 가운데 4개 항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인데 전차의 장갑판 등에 사용하는 질화알루미늄의 민수용반도체에의 응용, 스페이스셔틀 및 항공기의 구조재로 사용하는 탄소섬유의 복합재를 민수용품으

로 전환하기 위한 가공처리, 공장의 폐역처리 및 소음방지 등의 환경기술, 단백질의 구조분석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4개 항목 이외의 기술협력에선 미사일에 장비하는 목표추적장치를 공작기계에 활용하여 고도의 공장자동화를 실현하는 FA(팩토리 오토메이션) 시스템, 하이비전 등의 고품위 TV에 사용하는 액정표시 장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군사기술과 일본이 우위에 있는 민수용 응용기술을 결합시켜 개발효율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는 10개 항목에 대해 공동개발할 방침이다.

15. 지적권·조달우선협상국서 일 제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을 금년도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불공정관행관련 우선협상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USTR이 내주 초 발표할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무역관행 연례검토보고서에서 최근의 일본 정국불안을 감안, 일본에 대해서는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 보복조치)나 타이틀 7(정부 조달관련 보복조치) 등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하타 쏘토무 신임 총리가 앞서 연정 제1당이었던 사회당의 연정복귀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소수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정국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USTR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같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관행과 관련, 스페셜 301조·하의 보복조치를 취해야 할 지 또 취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할 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